

지방자치·종합

호남고속철도 민영화 반발 확산

철도노조, 국토부서 철회 촉구... 코레일도 반발

철도노조 호남본부 '민영화 반대' 1인 시위

국토부가 호남선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려는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X 분할 민영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화 계획 관련 공개질의서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0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KTX 기장들도 성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운영자 소속의 철도운영기관으로 이직을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기투자 비용과 거래비용을 감안할 때 운임인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에서도 호남고속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광주역 앞에서 노동자, 시민단체, 정치인,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민영화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직격장은 "호남고속철도가 민영화되면 현재 원가대비 50%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의 운행이 줄어들거나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호남 지역민들의 이동권이 사라지게 된다"며 "또 한, 선로 하나에 서로 다른 기관의 열차가 운행되면 대형 사고 위험도 크다"고 밝혔다.

전국 숲길 하나로 잇는다

산림청, 2021년까지 1조3천억 투입 지리산 등 5개산 기본 네트워크 구축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전국 숲길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숲길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숲길이 국가 숲길로 지정, 관리된다. 또 숲길이 등산로, 트레킹길(둘레길과 트레일),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구분 운영된다.

숲길기본계획에는 10년간 모두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숲길네트워크는 국가 숲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성·운영하는 지역 숲길을 연계한 형태로 구축된다. 국가 숲길은 백두대간, DMZ, 서부종단, 남부종단, 낙동정맥 등 5대 트레일과 실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 등 5개 명산을 기본 축으로 해 만들어진다.

산림문화자원 실태조사, 숲길 주변 경관관리, 숲길 인증제도 및 숲길 바꾸어치기 도입, 예약탐방제 확대, 숲길 휴식년제 및 휴식기간제 운영 등 숲길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도 실행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서비스를 위해 노선거리 20km 이상의 숲길에 안내센터가 설치되고 산림항공구조대도 운영된다.



KTX 기장들이 10일 서울역 맞이방에서 '호남고속철도 민간도입 개방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천 수달서식지 복원·에코 노믹스 추진

광주시 '녹색창조도시 8대 시책' 발표

광주시는 11일 국제환경 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2012 녹색창조도시 광주비전실현 8대 시책'을 발표했다. 광주가 마련한 '녹색 창조도시 8대 시책'은 자연과 인간, 경제가 조화된 녹색창조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녹색희망 선포 전략이다.

질요원 방지시설 확충 및 수달서식지 복원을 통한 맑고 푸른 광주천 만들기와 자연순환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CDM' 시책이며, '녹색행복 나누기'는 무등산 명산가치 공유 '무등지란' 시책과 자연친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도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공조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녹색창조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은 물론, 산업계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구촌에서 환경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저탄소 녹색경제 구현 모범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내 입국 탈북자 23000명 넘어서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2만3000명을 넘어섰다. 통일부는 11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총 2만31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은 2737명이 입국해 2010년(2379명) 대비 15% 증가했다.

중 구제역 발생... 정부, 국경검역 강화

여행객 휴대폰 검색·발판 소독 조치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발판 소독, 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과 사료 소독·폐기 등 조치를 한다.

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 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가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하고, 주 1회 이상 소독과 매일 질병 예방, 외부인·차량의 출입 통제 등 방역을 생활화할 것을 주문했다.

축산농가와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는 해외 출·입국 시 검역감사본부에 신고해 소독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구제역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연접형 신고전화(☎1588-9060)로 신고해야 한다. 중국 농업부는 최근 후베이성 바둥현의 돼지 24마리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이 농가 돼지 85마리를 도살처분했다.

한국 공적개발원조 증가율 2위

11억 달러... 국민 1인당 연 2만8천원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원조가 연간 11억달러를 넘어섰다. 국민 한 명당 지원액으로 나누면 약 2만8천원이다. 수출입은행은 2010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순지출 기준으로 11억74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직접 지원하는 양자 간 원조는 9억 100만달러다. 전년도 5억8100만달러보다 55% 급증했다.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 원조는 2억7300만 달러로 전년(2억 3400만달러)보다 16.3% 늘어났다. 양자간 원조의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가 65.2%로 가장 높다.

이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전체 양자간 원조의 10.6%를 지원받아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교육, 보건, 수자원, 위생 등 사회 인프라(9억600만 달러)와 교통, 에너지, 통신 등 경제 인프라(6억1000만 달러) 지원이 양자간 원조의 83.8%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조사를 보면 2010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증가율에서 DAC 회원 23개국 중 2위였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DAC 회원국 중 18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and '부동산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Real Estate Auction, Liquidation Asset Disposal Specialist). It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auction, including land, office buildings, and residential unit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 (062-236-3400).